

‘라이프 사태’ 연루 전 靑행정관 구속

검찰, 총선 끝나자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

다른 靑관계자 연루 정황 없어...수사 반경 ↑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이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청와대로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영장전담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라이프자산운용의 배후 주(錢主)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이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김씨는 청와대 근무 기간에 김 전 회장과 함께 라이프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의 존재는 이번 라이프사태

수사대상의 핵심인물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부각됐다. 해당 녹취록에서 장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청와대 행정관 직책이 박힌 김씨의 명함을 전달하며 “사실 라이프 거요, 이분(김씨) 이 다 막았어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동향 친구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김씨가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만났으며 스타모빌리티의 전신 인터넷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김 전 회장이 김씨를 이종필 전 라이프 부사장에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씨의 동생이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라이프사태의 핵심인물들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뒤를 바꾼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가 김씨와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에게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이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김씨 이외의 다른 청와대 인사들이나 여권 관계자가 라이프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청와대 뒷선으로 수사 반경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 라이프사태와 더불어 여권 인사들의 배후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신라젠 사건의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신라젠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신라젠 전 대표 등 전직임원 2명을 구속한 가운데 최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의석을 얻으며 압승함에 따라 검찰이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 진행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라이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이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에 판매했고 결국 이 펀드들이 환매 중지되면서 4000여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금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김윤호 기자

◆ 단신 ◆

여수 해양공원서 20대 남성 바다에 추락했다 구조

전남 여수 해양공원 앞 해상에 추락한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1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남 오후 11시7분쯤 A씨(28)가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 해상으로 추락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경구조대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신고 접수 7분만에 A씨를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에 빠진 A씨는 구조 후 약간의 자제온증을 호소했으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은 없었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이곳은 해상 추락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밤 식사하던 60대女 찾아가 살해후 달아난 60대

19일 오전 1시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A씨(64)가 지인 B씨(61·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A씨는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을 B씨와 함께 있던 지인에게 확인,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갈대밭서 밤새 해매던 90대 치매할머니 가족 품에

전남지방경찰청은 실종된 90세 할머니를 헬기 공중수색으로 찾아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전남 영암군 도포면 주거지에서 집을 나간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오전 3시까지 할머니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노환에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는 밤새 추위에 노출돼 생존상태를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태였다.

이에 영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남청과 군부대, 소방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청 항공대는 헬기를 급파하고 군부대와 소방당국은 각각 드론 2대와 병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펼쳤다.

같은날 오전 11시쯤 전남청 항공대는 공중 수색 50분만에 거주지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갈대밭에서 기력 없어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 지상 수색대에 위치를 전달해 구조했다.

무면허 목욕탕 종업원 대리주차하다 미용실 돌진

목욕탕 주차장에서 손님 승용차를 대신 주차하던 60대 종업원이 운전미숙으로 미용실로 돌진했다.

19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17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미용실에 아반떼 한대가 갑자기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이 사고로 미용실 업주 A씨(60대 여성)가 다리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미용실 전면 유리가 파손됐고 가게 내부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

경찰조사 결과 목욕탕 종업원 B씨(60대 남성)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가 목욕탕 주차장에 세워진 손님 소유의 아반떼를 후진시켜 비탈진 도로로 주차 장소를 옮기려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 5·18기념식 전 이틀간 금남로 집회 신고

유공자 명단 공개 등 요구...5·18단체 “물상식 처사”



지난해 18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가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16·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17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5월 16, 17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집회와 문화제’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는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1000명 참석 예상으로 신고했으며, 문화제는 1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000명 참석 예상으로 문화제 개최를 신고했다.

이들은 5·18 민주항쟁 중심지였던 5·18민주광장과 전일빌딩 앞, 금남공원 일대, 금남로 4가 일원에서 집회와 문화제를 개최

할 예정이다.

앞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동참해 행사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1988년부터 진행된 5·18전야제 행사도 처음으로 취소했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에 전남대 후문과 금남공원, 충장로 일대에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촉구하는 집회·행진을 진행했다.

5·18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사 애국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물상식한 처사”라며 “표현의 자유 명목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떨고 있는 ‘당선인’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8건

검찰이 21대 총선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과 관련된 18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1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과 목포·순천·해남·장흥지청에서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73명을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중 광주지검은 78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5명을 기소했고, 1명을 불기소했다. 7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후색선전이 30명(38.5%), 공무원 등 선거관련 20명(25.6%), 부정선거운동 19명(24.4%), 금품선거 4명(5.1%), 기타 5명(6.4%)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관련 행위로 입건된 비율이 높았고, 금품선거사범에 비해 후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